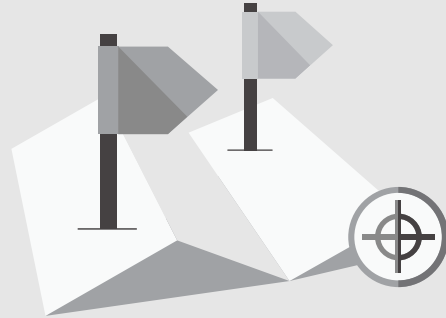


# 이달의 초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모니터링



임신·출산 지원 정책 모니터링: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이소영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모니터링: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조성호

고령자의 경제 및 사회활동 정책 모니터링: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강은나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모니터링과 정책적 시사점  
장인수

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김세진·이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모니터링과 정책적 시사점

Monitoring of Fertility Policies of Regional Local Government and Its Policy Implications

장인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글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분야별 사업 수와 예산 규모, 내용 및 구성상 한계점을 검토하였다. 검토 내용을 토대로 효과적인 정책 추진 현황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사업 분류 틀, 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역설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대응위원회와 같은 지역의 저출산 대응 정책 거버넌스 체계 개편, 시행계획 작성 관련 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 글의 정책 개선 대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추진 주체이자 관할 구역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조율 및 관리 주체, 중앙·기초 간 정책 소통의 매개체라는 특성에 주목한 데 기인한다.

## 1. 들어가며<sup>1)</sup>

이 글의 목적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 현황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간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은

공통 사업으로 표현되는 중앙정부와의 매칭 사업과 지역 특수적인 자체 사업이 병행하여 추진되었다. 이후 보다 자세하게 언급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공통 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이 있다. 이러한 점은 지역별로 각기 다른 정책 수요와 정책 추진 여건을 심도 있게 고려하였다

1) 이 글은 장인수, 정찬우. (2022).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고 말하기 어려운 한계점과 궤를 같이한다. 이러한 한계점은 매년 수립, 추진된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시행계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 현황에서 특히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정책 추진 주체와 조율 주체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정책 소통에 대한 매개 역할을 수행하며,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현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 형태가 공통 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공통 사업의 매칭과 관련된 정책 추진 여건이 지역별로 상이할 개연성에 보다 주목할 필요성과도 맞물려 있다.

또한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내실 있게 수행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에 더하여 저출산 대응 정책과 결과 간 인과성이 심도 있게 고려되지 못한 단편적인 평가와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애로 사항이 심도 있게 고려되지 못한 한계점에 대한 개선 대안 도출이 시급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이 글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 과제 도출 및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

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사업과 예산 현황을 살펴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의 수립 과정과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한 한계점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행계획 사업 분류 틀과 함께 내실 있는 성과평가 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지역 단위의 저출산 대응 정책 거버넌스 체계 개편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조율 주체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시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보다 실효성을 얻도록 하기 위한 정책 환경 조성을 주목한 데 기인한다.

## 2.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사업 현황 고찰

### 가. 저출산 대응 사업 현황 파악을 위한 정책 영역 구분

먼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이하 2021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사업의 특성을 살펴본다. 이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별로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 분야 사업 시행계획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고 간명하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다.

2021년 시행계획에서 세부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통 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구분된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4개 추진 전략에 포함된 세부 사업 정보가 간략하게 제시되는 목록 형식을 띠고 있다. 4개의 추진 전략은 I.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II.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III.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IV.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4개 추진 전략별 세부 사업의 정책 범주별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2021년도 시행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사업명과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을 토대로 각 정책 영역의 범주를 구분하였다. 이는 장인수, 이소영, 정희선, 고제이, 김세진(2022)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중앙정부 저출산 대응 정책 예산 분류 시 활용한 범주 중 저출산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범주를 준용한 것이다. 가족, 보건, 주거, 고용, 교육, 기타의 여섯 개 정책 영역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를 제외한 다른 다섯 개의 범주는 각 영역과 직간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세부 과제를 각각 포함한다. 기타는 상기 범주 이외의 세부 과제를 포함한다.

상기 분류 기준 적용 근거와 적용 과정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정부 정책 분류 기준을 준용한 이유는 2021

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4대 추진 전략별 세부 사업 나열로 인하여 정책 분야별 분포를 명확하게 살펴보기 어려운 데 있다. 즉 추진 전략별 해당되는 사업이 단순 나열되고 있어서 지역별 정책 영역의 특성을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을 포함하는 주요 사회정책 범주 구분을 적용한 것이다. 또한 상기 분류 기준은 중앙정부 정책과 동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각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특성을 중앙정부 정책 분류 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기에도 용이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만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각각의 세부 과제를 구분하는 것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정성적 판단에 기인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띠고 있다. 각각의 영역은 각 영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직간접적 연관성’은 2021년 시행계획 내 지역별 세부 과제 리스트에 제시되어 있는 사업명과 간략한 사업 내용을 토대로 판단한 것이다. 직간접적 연관성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이견이 생길 소지가 다

**표 1.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분야 사업 분류를 위한 정책 영역 구분**

구분	내용
가족	영유아 보육, 출산 지원 등 가족 영역과 직간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세부 과제
보건	건강, 의료 등 보건 영역과 직간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세부 과제
주거	주거 영역과 직간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세부 과제
고용	고용 영역과 직간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세부 과제
교육	교육 영역과 직간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세부 과제
기타	상기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세부 과제

자료: 장인수, 이소영, 정희선, 고제이, 김세진. (2022). 2022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및 핵심성과지표 개발 연구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장인수, 정찬우. (2022).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발간 예정)에서 재인용.

분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가족 영역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해 크게 이견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은 출산 지원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가족 영역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점에서 보건 영역에 포함될 개연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업을 정성적 판단과 더불어 중앙정부 사업 분류 결과를 참고하여 보건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특성이 존재하는 사업 분류에 대한 모호함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정책 영역 구분 시 고려한 직간접적 연관성은 뚜렷한 판단 기준이 없고 사업명과 사업 내용, 중앙정부 사업 분류 결과 등을 근거로 정성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현재 2021년 시행계획에서 제시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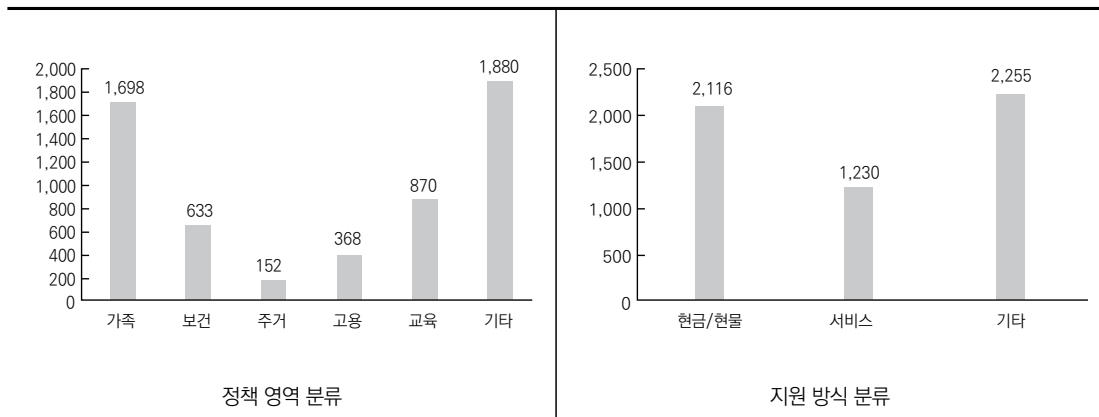
고 있는 세부 과제 리스트 내 사업을 보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나. 저출산 대응 사업 현황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기 정책 영역을 구분하고, 추가적으로 지원 방식을 구분한다. 이러한 지원 방식 구분은 현금·현물과 서비스는 정책 대상자가 직접적으로 수혜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기타의 경우는 정책 대상자가 직접적으로 수혜받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책 영역별 사업 개수는 기타가 1880개로 가장 많고, 가족(1698개), 교육(870개), 보건(633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원 방식별 사업을 현금·현물과 서비스, 기타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대체적으로 현금·현물,

그림 1.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분야별 사업 현황

(단위: 개)



주: 1) 정책 영역 분류상 기타 영역은 타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인프라 조성 등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  
 2) 지원 방식 분류상 기타 영역은 조세 감면, 정보 제공,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음.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b),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서비스 직접 지원 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세 범주 중 기타의 경우 사업 개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의 경우는 정책 기반, 인프라 조성 등의 사업을 의미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사업은 정책 대상자가 직접 수혜받는 비율 못지않게 간접적인 인프라 조성에 대한 방향성도 비교적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방식별 사업 개수는 기타, 현금·현물, 서비스 순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현금·현물과 서비스가 직접 지원임을

고려하면 기타인 간접 지원에 비하여 직접지원 사업 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직접 지원 사업 수 비율 약 59.7%, 간접 지원 사업 수 비율 약 40.3%).

이러한 분류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가족, 기타 범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은 동시에 교육, 보건 범주가 그다음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별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 주거 영역의 사업 수는 다른 범주에 비하여 크게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표 2.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분야 사업 분류·정책 영역별

(단위: %, 개)

구분	가족	보건	주거	고용	교육	기타	합계
서울	36.6	13.4	6.3	8.9	14.3	20.5	112
부산	32.1	6.2	1.5	7.8	16.4	36.0	536
대구	33.7	8.5	1.0	4.5	19.1	33.2	199
인천	36.5	13.9	2.0	5.6	11.5	30.6	252
광주	28.2	9.4	2.0	8.1	4.0	48.3	149
대전	36.3	5.6	0.4	6.8	10.3	40.6	234
울산	44.3	4.0	2.3	5.1	12.5	31.8	176
세종	31.5	16.4	1.4	1.4	9.6	39.7	73
경기	24.2	8.9	3.1	7.1	22.2	34.6	914
강원	34.7	8.8	1.0	6.1	16.5	33.0	297
충북	31.9	7.4	2.6	9.8	15.6	32.7	379
충남	31.9	18.3	2.4	7.1	14.0	26.3	464
전북	28.4	16.2	2.4	7.9	8.8	36.3	328
전남	25.2	22.7	4.7	1.9	12.3	33.2	365
경북	24.2	13.1	2.4	5.9	16.7	37.7	496
경남	33.6	11.5	4.7	7.4	14.7	28.1	512
제주	24.4	6.1	7.0	1.7	27.8	33.0	115

주: 정책 영역 분류상 기타 영역은 타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기반 인프라 조성 등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b),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장인수, 정찬우. (2022).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발간 예정)에서 재인용.

주거 영역의 사업이 다른 영역의 세부 사업과 비교하여 볼 때, 지원 대상이 대부분 청년에 한정되어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거 영역의 사업은 대부분 월세 지원, 임차보증금 등 청년 대상 주거 비용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주거 영역 사업이 주거비 지원을 포함하여 주거 인프라(임대주택, 희망타운 등) 공급 등 보다 세분화된 범주로 구분됨과 동시에 지원 대상의 범위도 청년(가구)뿐 아니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보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사뭇 다르다. 이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특히 주거 인프라 공급과 같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추진에 대한 재정적 여건이 중앙정부에 비하여 충분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원 방식별 분류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현금·현물과 같은 현금성 지원 사업 수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은 지역은 경

**표 3.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분야 사업 분류: 지원 방식별/재정자립도, 고령인구비율(2021년)**

(단위: %, 개, %)

구분	현금·현물	서비스	기타	합계	재정자립도	고령인구비율
서울	24.1	20.5	55.4	112	75.6	16.8
부산	25.0	31.5	43.5	536	46.1	20.4
대구	32.7	34.7	32.7	199	44.6	17.5
인천	37.7	16.3	46.0	252	50.3	14.8
광주	21.5	63.1	15.4	149	40.8	14.8
대전	28.6	26.5	44.9	234	39.9	15.2
울산	34.1	24.4	41.5	176	49.6	13.6
세종	39.7	17.8	42.5	73	58.8	10.1
경기	31.8	22.7	45.5	914	57.3	13.9
강원	37.4	15.5	47.1	297	24.5	21.7
충북	42.0	17.4	40.6	379	28.3	18.9
충남	45.7	16.6	37.7	464	32.3	19.8
전북	45.1	14.3	40.6	328	23.1	22.3
전남	56.4	17.0	26.6	365	22.2	24.3
경북	35.9	19.4	44.8	496	24.9	22.7
경남	52.2	18.4	29.5	512	33.5	18.4
제주	30.4	18.3	51.3	115	32.7	16.3

주: 1) 지원 방식 분류상 기타 영역은 조세 감면, 정보 제공,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음.

2) 재정자립도는 세입 과목 개편 후 수치임.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b),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장인수, 정천우. (2022).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발간 예정)에서 재인용함. 통계청(2022a), 재정자립도(시도/시/군/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921&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921&conn_path=I2)에서 2023. 2. 2. 인출. 통계청(2022b), 고령인구비율(시도/시/군/구)[데이터 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conn_path=I2)에서 2023. 2. 2. 인출.

협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 고령화가 심화된 지역이라는 점이다. 이 지역들의 높은 현금성 지원 사업 비중과 관련하여 사업 재원 조달과 관련된 정책 여건, 이러한 정책 여건이 중앙정부와의 매칭 사업으로 구성되는 공통 사업 추진 여건 및 자체 사업 추진 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다. 저출산 대응 사업 예산

저출산 대응 사업 예산을 앞서 살펴본 정책 영역별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가족 영역의 예산 규모가 다른 정책 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장인수 외(2022)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중앙 부처 시행계획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성과 사뭇 다르다. 즉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 사업 예산은 주거 영역의 예산 규모가 가장 크고 가족 영역의 예산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가족 예산이 다른 영역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가족 정책 사업 중 예산이 큰 사업은 가족 영역에 포함되는 영유아보육료, 돌봄 사업이라는 점에 크게 기인한다. 가족 영역에 편중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분포 특성은 공통 사업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시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육, 돌봄 측면에서 예산이 매우 큰 사업이 모두 공통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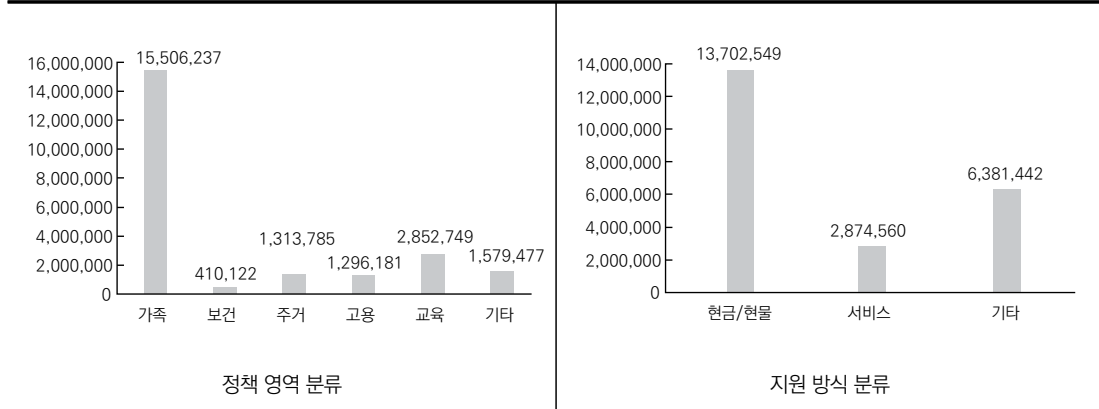
업이라는 점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자체 사업으로만 추진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지지하는 근거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보육·돌봄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 형태 공통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불가피한 특성을 여실히 보여 준다. 다만 자체 사업은 중앙정부의 시각·접근과는 다르게 각각의 지역별 차등적인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음에도 이미 정해진 재정 여건 제약하의 예산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한 매칭으로 인하여 자체 사업의 예산 규모 비중이 작은 특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공통 사업과 자체 사업 모두 지역의 정책 수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예산 규모가 큰 사업 중심의 공통 사업에 따른 매칭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한 정책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자체 사업 추진 여건이 보다 축소되는 사향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매칭 비율의 조정을 고려할 수 있는바 지역별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다만 이 역시도 여러 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함과 동시에 이견이 적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

지원 방식별 예산은 대체적으로 현금·현물과 서비스로 구성되는 직접 지원 예산 규모의 비중이 기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접 지원은 정책 대상자가 현금·현물로 받는 성격임을 상기할 때, 현금성 지원은 경로 의존적인 성격이 강한 동시에 정책 수요도가 다



그림 2.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분야별 예산 규모 현황

(단위: 백만 원)



주: 1) 정책 영역 분류상 기타 영역은 타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기반 인프라 조성 등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  
 2) 지원 방식 분류상 기타 영역은 조세 감면, 정보 제공,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음.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b),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른 정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밖에 없는 특성을 띠고 있다. 이 때문에 정책 수혜자가 감소하지 않는 이상 예산 규모를 줄이기 어렵다. 즉 현금성 지원 예산 규모를 삭감하는 정책 방향은 정책 수요의 반발이 작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지속적인 정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재정 여건이 넉넉할 필요가 다분히 있다. 이는 재정 자립도에서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성과 같이 정책 추진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속적으로 정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는 동시에 매칭 사업 부담에 따라 자체 사업 추진 여건이 악화되고 결과적으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사업이 추진이 여의치 않은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분야별 예산 규모의 분포는 현재의 지

역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 사업과 이에 대한 재정적 여건 간 연관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정책 영역별 분류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이 대체적으로 [그림 2]의 평균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향을 보여 주고 있지만, 범주별 차이는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족 영역의 예산 비중은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 간 비중의 차이가 다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광주(전체 예산 중 82.7%가 가족 예산인 반면 전남(45.2%), 경기(53.9%), 인천(55.4%)은 상대적으로 가족 예산 비중이 낮고, 교육 영역의 예산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전남 21.4%, 경기 26.3%, 인천 18.3%).

표 4.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분야 사업별 예산 분류: 정책 영역별

(단위: %, 백만 원)

구분	가족	보건	주거	고용	교육	기타	합계
서울	70.7	1.6	18.0	3.8	3.4	2.4	3,879,536
부산	69.5	1.7	0.5	10.2	2.8	15.4	2,167,752
대구	73.5	1.3	0.0	0.6	21.0	3.7	935,056
인천	55.4	1.1	19.9	1.5	18.3	3.9	1,905,684
광주	82.7	1.2	2.0	5.3	1.2	7.7	250,219
대전	72.8	7.2	0.2	3.5	10.1	6.2	762,965
울산	82.4	0.5	0.6	0.4	12.6	3.5	590,011
세종	61.7	1.9	0.0	0.4	6.7	29.3	105,035
경기	53.9	1.3	0.3	10.3	26.3	8.0	5,313,713
강원	77.6	1.1	10.3	5.4	2.5	3.0	811,358
충북	62.9	1.1	6.5	3.9	11.1	14.4	950,755
충남	71.5	3.0	0.8	4.1	17.8	2.8	768,564
전북	72.2	4.8	0.6	7.8	1.9	12.6	710,947
전남	45.2	7.4	2.1	10.9	21.4	13.0	246,635
경북	80.6	1.8	1.3	1.6	6.6	8.0	1,291,919
경남	87.5	1.4	0.4	4.7	2.7	3.4	1,873,104
제주	64.4	0.8	4.1	0.7	22.7	7.3	395,299

주: 정책 영역 분류상 기타 영역은 타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기반 인프라 조성 등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b),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장인수, 정찬우. (2022).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발간 예정)에서 재인용.

표 5.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분야 사업별 예산 분류: 지원 방식별

(단위: %, 백만 원)

구분	현금·현물	서비스	기타	합계
서울	44.5	28.4	27.1	3,879,536
부산	35.8	11.9	52.3	2,167,752
대구	84.5	6.3	9.3	935,056
인천	60.5	36.9	2.6	1,905,684
광주	66.3	25.8	7.9	250,219
대전	70.1	12.1	17.8	762,965
울산	72.2	5.8	22.0	590,011
세종	71.9	14.2	14.0	105,035
경기	68.8	1.6	29.7	5,313,713
강원	45.6	7.6	46.9	811,358
충북	42.7	5.8	51.6	950,755
충남	83.9	5.3	10.8	768,564
전북	60.6	7.7	31.7	710,947
전남	32.6	18.1	49.4	246,635
경북	56.6	2.8	40.6	1,291,919
경남	84.8	8.3	6.9	1,873,104
제주	37.2	4.8	58.0	395,299

주: 지원 방식 분류상 기타 영역은 조세 감면, 정보 제공,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음.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b),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장인수, 정찬우. (2022).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발간 예정)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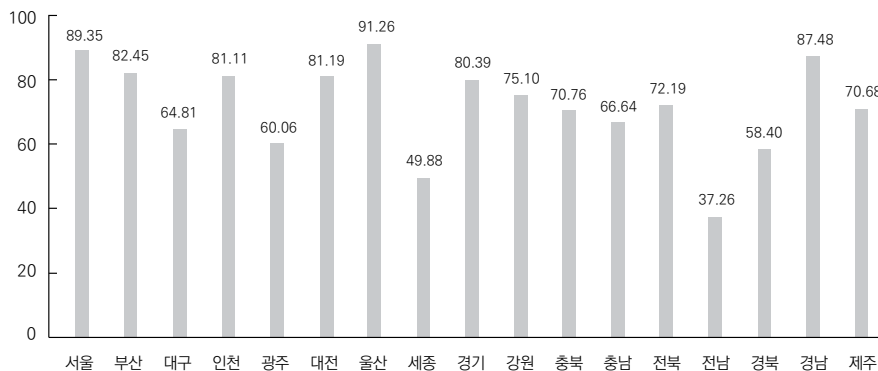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식별 예산 규모 분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체적으로 현금·현물과 서비스로 구성되는 직접 지원 예산 규모의 비중이 간접 지원 비중보다 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세부 범주별 비중이 상이한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는 특히 기타 분야에서 더욱 명확하게 관찰된다. 가령 인천은 기타 영역의 예산 규모가 전체 저출산 대응 예산의 2.6%에 불과하고 경남, 대구, 광주도 각각 6.9%, 9.3%, 7.9%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작다. 반면 부산, 충북, 전남, 강원은 기타의 비중이 각각 52.3%, 51.6%, 49.4%, 46.9%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공통 사업과 자체 추진 사업 간 예산 규모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 지역의 경우 자체 사업에 비하여 중앙정부와의 매칭 사업인 공통 사업 비중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공통 사업 비중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60~90% 범위에서 형성되어 있다. 공통 사업 예산 규모의 비중은 울산(91.26%), 서울(89.35%), 경남(87.48%), 부산(82.45%), 대전(81.19%), 인천(81.11%), 경기(80.39%)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칭 사업인 공통 사업의 예산 규모가 큰 지역이 서울, 경기, 울산 등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나은 지역인 특성은 공통 사업은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 규모가 큰 매칭 사업의 특성(가령 영유아보육료 사업 등)에 따라 매칭 추진이 쉽지 않음을 경험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공통 사업은 중앙정부의 시행계획을 준용하여 공통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이 대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재정 여력이 충

그림 3.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대응 사업 공통 사업 비중

(단위: %)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b),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분히 확보되지 않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매칭 사업을 구성하기 어려운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개관

#### 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수립 과정: 시행계획 수립 과정 고찰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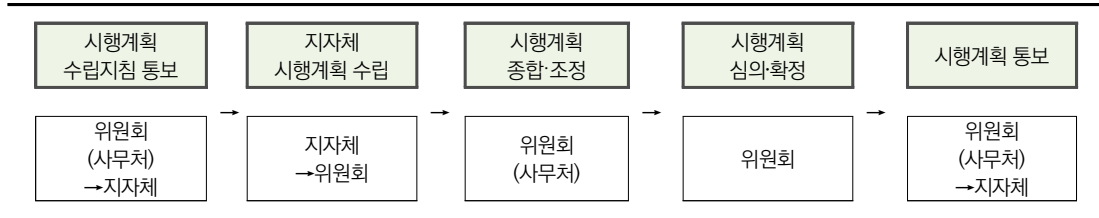
다음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의 수립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이는 중앙정부 및 지방의 정책 수립 간 유기적인 정책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이라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2021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수립지침(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a, 이하 수립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시행계획은 위원회가 각 지자체에 수립지침 통보, 지자체가 시행계획 수립하여 위원회에 전달, 위원회에서 종합조정, 심의 확정 단계 거쳐 시행계획 종합, 위원회가 각 지자체에 통보 절차를 거쳐 작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단계는 시행계획을 종합하고 조정하며 심의, 확정하는 단계다. 이는 정책 수요와 정책 추진 여건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라보는 시각, 의견의 괴리를 효율적으로 검토하고 수렴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그럼에도 수립지침에는 해당 단계의 주체로 위원회(사무처)만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단계에서 위원회와 지자체 간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수립지침에서는 또한 시행계획 작성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과거 5년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성과 및 향후 개선 방향, 지역별 인구 변화 현황과 전망, 이와 맞물린 정책 추진 여건 진단,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5년간의 정책 추진 방향, 당해 연도(가령 2021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 등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부 자료 참조). 특히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시군구 내 자체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에서는 중앙 부처의 시행계획과 유사한 형태로 사업별 사업 번호, 사업명, 사업 목표와 내용, 이전 연도(가령 2020년도) 추진 실적, 당해 연도(가령 2021년도) 세부 추진계획 작성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만 [그림 4]의 2021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수립 절차 내에 환류 과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과년도 성과목표 달성 여부 및 미달성 사유, 추진과정 내 애로 사항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평가가 추진되고, 이러한 사항이 차년도 수립에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림 4.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2021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수립 절차**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a),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2021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수립지침, p. 1의 그림을 그대로 제시함. 장인수, 정찬우. (2022).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발간 예정)에서 재인용.

**나.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한계점 진단: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2021년도 시행계획을 보면 앞서 살펴본 시행계획 수립지침의 내용이 비교적 충실하게 집적·취합되어 있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표 6>에 보이는 것처럼 총괄 현황과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에 대한 범주의 정보이다. 즉 정책 추진 여건과 정책 수요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5년간 정책 추

진 방향과 같은 로드맵,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 및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몇 가지의 개선 필요 사항도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행계획에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에 대한 개선 방향과 연관되어 있다. 먼저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추진 기간 내 지속적인 환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 가령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린 제4차 기본계획 추진 시기에는 코로나19 이전에 수립한 성과목표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향후 5년 및 당해 연도 추진 방향과 같은 5년

**표 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각 연도 시행계획(2021년도) 구성**

내용	
I. 총괄 현황	당해 연도 지자체 시행계획 사업 예산 (총예산, 추진 분야별, 생애 주기별, 지원 유형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지역 현황(주요 인구 지표), 총예산 규모, 자체 사업 예산 규모, 4개 추진 전략별 주요 사업 현황(지원 대상, 예산 포함)
II.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최근 5년간 정책 평가(저출산/고령사회/개선 및 보완)
	정책 여건 분석(현황 및 전망/정책 추진 여건)
	향후 5년간 정책 추진 방향(저출산/고령사회)
	2021년 정책 추진 방향(저출산/고령사회)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세부 사업별 예산 현황(사업 분류, 당해 연도 및 이전 연도 예산 규모, 예산 증감, 주요 내용(사업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주: 다만 상기 내용별 구성은 II.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부문에서 지역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b),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2021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장인수, 정찬우. (2022).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발간 예정)에서 재인용.

간의 로드맵 방향도 수정·보완해야 한다.

또한 현재 공표된 지자체 시행계획은 수립지침에서 확인한 시도 및 시군구별 3건의 역점 시책과 자체 사업의 세부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역점 시책 및 자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이 중앙정부 시행계획과 상이한 부분이 개별 사업의 소관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사업 중 소관 주체가 제시되어 있지도 않다. 특정 지역의 세부 사업별 예산 현황 내 세부 사업명이 중복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체 사업의 소관 주체가 명시된다면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단적으로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세부 사업의 경우 추진(소관) 주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인지 기초지방자치단체인지 구분되지 않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자체 사업 중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예산 구성과 관련하여 광역과 기초 간 매칭 여부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부분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정책 추진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세부 과제별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에 대한 사항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 있지 않다. 가령 출산지원금 사업의 경우 수혜자 규모와 예산 규모 등이 개괄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

#### 4. 나가며: 개선 대안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2021년도 시행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지침의 내용을 중심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 사업과 예산, 시행계획 수립 과정을 검토하고, 시행계획 내용에 대한 보완과 관련된 개선 필요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궁극적으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효성도 도모하기 위한 개선 대안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개선 대안은 효과적인 정책 추진 현황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행계획 사업 분류 프레임 개선, 성과평가 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대응위원회와 같은 지역의 저출산 대응 정책 거버넌스 체계 개편, 시행계획 작성 관련 개선 사항에 대한 것이다.

##### 가. 시행계획 정책 분류 프레임 개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내 정책 분류의 프레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시되고 있는 사업이 어떠한 범주에 포함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지역별로 판단에 따라 반영하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 분석이 어려운 한계점이 노정되고 있다. 세부 사업명을 통해 대략적인 정책의 범주를 유추할 수 있지만, 각 정책 범주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 분류와 추적 관리가 추진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표 7.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저출산 영역 구성 프레임 개선안

분야	대영역		중영역
저출산	가족	임신·출산	제도 구축 및 개선 지원
		보육·돌봄	제도 구축 및 개선 지원
		일·가정 양립	제도 구축 및 개선 지원
		문화	(가족 문화, 환경) 제도 구축 및 개선
		보건	(의료·건강관리) 제도 구축 및 개선 (의료·건강관리) 지원
		주거	제도 구축 및 개선 지원
		고용	제도 구축 및 개선 지원
		교육	제도 구축 및 개선 지원
		기타	상기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정책 지역 특화 정책

주: 1) 대체적으로 지역(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 내 세부 사업은 상기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

2) 지원은 정책 대상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과 인프라 등의 간접 지원을 의미함.

3) 상기 저출산 영역 구성 프레임은 지자체별 현황에 대한 비교 분석과 종합 측면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임.

4) 2021년도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현재 해당 자료에서 제시되고 있는 세부 사업별 사업 분류(공통·자체), 전년도 예산, 당해 연도 예산, 전년 대비 예산 증감 내역, 사업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사업 분류 자체 범주의 광역·기초 구분, 사업 내용과 관련하여 사업 예산 산정 근거, 사업 수혜 인원, 성과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자체 성과지표 구축 및 관리 여부, 추진 주제별 예산 규모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자료: 장인수 외(2022), pp. 59-64의 논의를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장인수, 정천우. (2022).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발간 예정)에서 재인용.

이에 앞서 사업 현황과 사업 예산 규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분한 가족, 보건, 주거, 고용, 교육, 기타의 범주 구분을 큰 틀에서 추가적으로 가족 범주는 임신·출산, 보육·돌봄, 일·가정 양립, 문화의 세부 범주로 구분하는 프레임 개선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7>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분류 프레임 개선 대안은 각각의 세부 사업을 배타적으로 분류하면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일관성 있는 세부 사업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 나. 성과평가 체계 구축과 활용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성과평가 체계를 내실 있게 구축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그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성과평가의 경과에 대하여 검토함과 동시에 시행령 등의 법, 제도 정비 보안을 통해 향후 성과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단적으로 매년 사업 추진 계획(안)에 대한 논의는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공표되나, 이러한 사업 추진 실적(수혜자 수, 예산 투입, 초기 설정하였던 목표 달성 여부, 애로 및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사항은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견지하는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부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 그리고 이에 대한 공표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비판적인 논의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별 지역의 인구 동태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인구 동태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우선순위라든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성과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관측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히 요구된다.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역 인구 동태를 지속적으로 관측 및 분석하고, 정책 환류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특히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성과평가 체계 구축과 활용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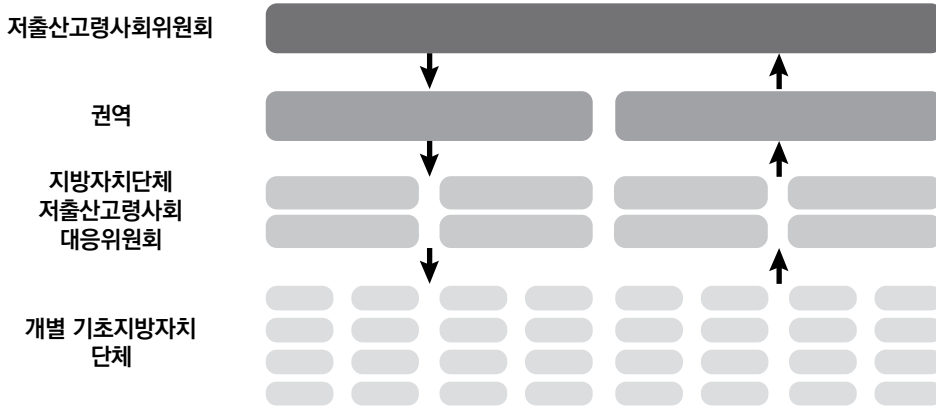
**다. 중앙정부-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대응위원회(가칭)” 설치 검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보다 유기적인

정책 소통을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시행계획 수립지침에서 확인한 각 단계의 내용에는 주체별 유기적인 소통에 대한 논의가 없다. 관련하여 최근 지역 인구 위기에 보다 주목하고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는 지역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보다 원활한 정책 소통이 필요하다. 또한 소통 과정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하여 지금까지 간과되어 온 중앙·지방 간 거버넌스 체계를 내실 있게 구축하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대응위원회’(가칭) 설치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9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군·구 및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개념과 유사하게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소통의 매개와 조율 주체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보다 강조돼야 한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운영 측면에서 유발되는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대응위원회’(가칭)는 기본적으로 권역별(5~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연합)로 구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접 지역 간 유사성을 고려한 점에도 기인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구성 형태를 띠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앙정부 인구정책 추진 거버넌스 체계 개편



그림 5.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대응위원회'(가칭) 체계 구성안



자료: 장인수, 정찬우. (2022).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발간 예정)에서 재인용.

과 밀접하게 연관시킬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 사회기본법과 시행령 보안을 통해 법·제도적 기반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라. 시행계획 작성 관련 개선 대안

앞서 살펴본 시행계획 주요 내용의 한계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에서 벗어나 과년도 성과지표 내 목표 달성도 및 외생적 요인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보다 유기적으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추진 기간 내 환류 과정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이러한 논의가 차년도 목표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행계획 작성 지침에 성과목표 변경 사항에 대한 항목을 추가 생성하고, 이를 필수적으로 작성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

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계획 수립 시점과 추진 과정 시간 여건과 외생적 요인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실 있는 정책 추진과 성과 평가를 위해 이것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단적으로 코로나19에 따라 특정 지역의 저출산 양상과 이를 둘러싼 정책적 한계가 여성 청년층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면 향후 정책 방향은 이들을 보다 주목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립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지역별 역점 시책과 자체 사업의 세부 내용 중 주된 내용(사업 내용과 성과 지표 및 목표 등)에 대해서는 집계표나 차트 등을 활용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별 주된 정책 방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주된 정보임과 동시에 지역 간 상황을

공유하며 지역 상생 기반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이 밖에 개별 사업의 소관 주체 및 매칭의 특성 등도 보다 심층적인 정책 모니터링을 위하여 일목요연하게 취합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㉞

2. 인출.

통계청(2022b), 고령인구비율(시도/시/군/구) [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conn_path=I2)에서 2023. 2.

2. 인출.

## 참고문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제18877호. (2022).
- 장인수, 정찬우, 이소영, 이도훈, 김세진. (2021). **202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인수, 정찬우. (2022).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발간 예정)**.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인수, 이소영, 정희선, 고제이, 김세진. (2022). **2022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및 핵심성과지표 개발 연구**.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a).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2021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수립지침(내부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b).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지방자치단체)**.
- 통계청(2022a), 재정자립도(시도/시/군/구)[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921&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921&conn_path=I2)에서 2023. 2.

# Monitoring of Fertility Policies of Regional Local Government and Its Policy Implications

**Chang, Insu**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article presents the current status of fertility policies put into effect by local governments in Korea, and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 for policy improvement. In reviewing the 4th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implemented in 2021, we examined the number and budget size of projects underway in different policy areas. In addition, this article outlines the limitations these projects have and presents what should be done to make improvements on them in terms of their substance and composition.

This article emphasizes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project classification framework to promote effective management of policy implementation, establishment of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reorganization of fertility policy governance system, and improvements related to the preparation of action plans.